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재 억제효과 미미 예방보다 처벌 방점”

野, 중처법 중간점검 토론회

중처법 위반사건 처리도 지진부진
구체적·명확한 법령·기준 등 절실

산재기업 영업익 5% 과징금 비판
피해자 유족 보상 강화 의견 제시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기업 처벌 위주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중처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주로 논의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전후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중처법이 도입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산재 억제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수에 변화가 없었다.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었던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변화 없었다.

이동영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가 2986건이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 사건은 15건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이 왜 예방효과가 떨어지냐에 대한 교훈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처벌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 오퍼를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 등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산재가 일어나니까 영업정지, 구속 등 온갖 협박을 한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인데, 거기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같은데 그만 큼 피해 유족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 인걸 지적하면서 “중처법은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 산업 안전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어 할 법이 애시당초부터 형사처벌 위주의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아무리 봐도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에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이상 과징금은 기업들 죽으라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이중삼중 기업을 옥죄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청년 주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년문제 해결 없이 韓 미래도 없어
미시정책·근본적 해결책 동시 추진”
청년담당관에 임명장 수여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양대 핵심 청년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난제(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왼쪽), 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거쳐 지난달 19일 임용된 바 있다. 이주형 담당관은 1993년생으로 서울시 청년 부서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했고 1994년생인 최지원 담당관은 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뽑은 점을 언급하며 “꽤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청년비서관은) 모경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꼭 정치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있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와야, 또 여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내란종식으로 국가 정상화” vs “與,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

〈민주당〉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박태홍 “尹 재임 시 코스피 5.05% ↓
李 정부 3개월 반 만에 24% 상승”

나경원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與,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흔들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 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 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 장관에게 지시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태홍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불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말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CD S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해의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